

최대호의 맛있는 우리말



'웃어른'과 절음법칙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고자 한국어교육과를 만든 것이 2005년의 일이다. 그때부터 한국어 교수법을 가르쳤으니 짧은 세월은 아니다. 외국인들에게 연음법칙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절음법칙을 알려주기는 쉽지 않다. 대표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형태소라는 개념도 가르쳐 주어야 가능하다.

이것은 한국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발음해 왔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절음법칙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웃이[오시]'와 '웃안[오단]'의 발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똑같이 'ㅅ' 뒤에 모음을 연결되는데, 하나는 [오시]라고 'ㅅ'으로 발음하고, 하나는 [오단]이라고 'ㄴ'으로 발음한다. 여기서 뒤에 있는 '웃안'을 왜 [오단]으로 발음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웃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에게 처음 들어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우서른]이라고 읽는다.

절음법칙이란 '합성어나 단어 사이에서 앞의 받침이 모음을 만날 때, 받침이 그 모음 위에 연음되지 않고 끌어져서 대 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웃어른[우더른]'이나 '웃안[오단]'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쉽게 명사와 명사가 만나면 앞의 받침이 대 표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기억하자!

중부대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문화회 회장

미디어 프리즘

맹세희
산업2부장

최근 후배 기자가 한국거래소 근처에서 호두과자를 산 사람이 실수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고가 있었다고 해 기사를 써보라고 했었다. 착오송금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실수라서 그럴 경우 대응법을 중심으로 쓰자고 했다. 기사는 대박이 났다.

그런데 최근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직원이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2000 원~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단위를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BTC)으로 착오 입력하고 송금하는 재앙이 발생했다.

62만 원이 아닌 총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당첨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2000 개

씩 받았는데, 이는 1명당 약 1970억 원이

라고 한다.

빗썸이 위탁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비트

코인이 4만6000개 정도인데, 보유 물량의 12배 넘는 '유령 코인'이 살포된 것이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중 일부는 현금화돼 거래소 밖으로 유출되고, 한때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나 이상 거래로 분류돼 지급이 즉각 정지되거나 거래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루 1조 원 안팎 돈이 거래되는 국내 2위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빗썸은 이 같은 오류를 사건 발생 20분 뒤인 오후 7시 20분쯤 인지하고, 오후 7시 35분에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

입금이 잘못된 계정들에는 로그인을 차단했다. 빗썸은 7일 오전까지 전체의 99.7%인 61만8212개가 회수됐다고 밝혔다. 약 1700억원에 해당하는 1788개는 당첨자들이 매도했는데, 이 중 빗썸은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전 세계 유동 비트코인 2000만 개의 3%가 넘는 '유령 코인'이 생겨난 것이다.

당첨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2000 개

씩 받았는데, 이는 1명당 약 1970억 원이

라고 한다.

빗썸이 절대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준다. 제한된 연산 자원과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사실은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은 반도체와 ICT 인프라에서는 세계적 강국이지만,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산업에서는 아직 뚜렷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술력 부족보다는 산업 전략과 생태계 설계의 문제로 봄아 한다.

한국 AI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범용 초거대 AI 모델 경쟁에서 벗어나 산업 특화형 AI에 집중해야 한다. 제조, 의료, 교육, 금융, 국방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고품질 데이터와 혁신 경험이 축적돼 있다. 이러한 영역에 특화된 AI 솔루션은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오픈 소스 생태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 AI 기업들이 빠른 성장은 폐쇄적 개발이 아닌 개방형 기술 공유와 집단적 혁신 구조에서 비롯됐다.

한국 역시 대기업 중심 구조를 넘어 스타트

이 사고는 우발적 사건으로 보이고 그렇게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 만약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사고를 가장한 고의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치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할수록 황당한 일이다.

우연을 가장한 고의사고는 인간의 심성에 악한 면이 내재되어 있는 한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또 정치적 이해나 목적에서 그리고 국제질서 교란을 목적으로 얼마든지 실수나 관리부실을 핑계로 일어날 수 있다.

건조한 계절 실수를 빙자한 방화가 없으란 보장이 없다. 요즘 잦은 대형산불에도 의심의 눈길이 가는 세태다. 누군가 만약 바람이 심한 주유소 주변에 담뱃불을 켰다가 떨어진 휘발유에 옮겨붙기라도 한다면, 산행 중 담배를 편다고 라이터불을 당겼다 나뭇잎에 옮겨붙기라도 한다면, 이를 실화나 실수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그 피해자들의 고통의 눈물은 또 얼마나 아플 것인가.

실수라는 이름으로 위장되는 사건사고라도 절저히 분석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다.

社說

가상자산, 은행 수준 관리 체계 마련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장부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 대비책이 시급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벌어진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과정이 일과된다. 사고 수습과 책임 규명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에도 악영향이 크다. 거래소가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 약 60조 원어치가 지급되고, 시세 급락을 초래한 점 등에 대해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빗썸은 고객 확보 목적이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이는 당첨금 지급 때 '원' 단위를 '비트코인 개수'로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다. 1명당 받을 당첨금 2000원이 20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2000개가 된 셈이다.

이벤트 참여자 695명 중 랜덤박스를 연 당첨자 249명에게 당첨금 2000 원~5만 원씩 총 '62만 원'을 주려다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빗썸 측은 오류를 확인한 즉시 장부(원장) 기표를 수정 조치해 99.7% 오지급분을 회수했고, 나머지 0.3% 중에서 1788개는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지만 이 가운데 93%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잖다. 가상화폐는 분산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구현된 디지털 자산으로, 중앙은행 없이 노드(Node) 간 합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빗썸 사고 핵심은 보유자산 초과한 코인 지급

재발 방지 위해 원인 정확하고 투명하게 규명

실제 자산 총량과 장부상 기록 자산 일치해야

노드는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래 기록을 저장·검증·전파하는 모든 컴퓨터나 기기를 뜻한다. 많을수록 안전하지만, 거래소 해킹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

바로 이 대목이다.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보유 자산을 초과해 코인을 지급한 매우 중대한 사고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오지급 실수'가 아니라 '준비자산 증명 실패'라는 사실이다. 준비 자산 증명은 거래소가 운영인에 실제 보유한 자산 총량과 장부에 기록된 고객 보유 자산 총량이 항상 일치하도록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코인거래소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빗썸의 경우에는 보유량(약 5만 개로 추정)을 크게 웃도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정상 자산처럼 인식해 지급된 것이다. 정상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유통 장부 수량이 운영인 자산을 1~2%만 초과해도 즉시 알림이 울리고 1~2분 내에 거래 정지가 이뤄졌을 것이다. 한데 이번 사고에서는 거래출금 차단까지 35분이나 걸리고 그 사이 실제 거래도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거래소 내부 장부(Off-chain)와 실제 운영인 간 실시간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문제는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크다.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의도적으로 작동 안 되게 방지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원인부터 정확하고 투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하튼 고의적 장부 조작만으로 유령 코인을 유통시킬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 같은 제1금융권 수준의 엄격한 내부통제와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신속히 조치하기 촉구한다.

중국 AI '딥시크'의 부상과 한국의 전략적 전환

인공지능세상

권희준 세경대
인공지능드론센터 교수
(사)한국인지과학
산업협회 대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챗봇 서비스가 글로벌 앱스토어 상위권에 오르며 세계 AI 시장에 새로운 긴장과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생 기업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대안을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첨단 기술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알고리즘 최적화, 경량화 모델, 응용 중심 전략을 통해 AI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오픈AI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가 유자될지, 중국이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양극 체제로 전환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중국에 딥시크와 유사한 AI 기업이 4000개 이상 존재한다는 점은 한국 AI 산업에 결코 가볍지 않은 경고다.

딥시크의 부상은 AI 경쟁에서 하드웨어

업, 대학, 연구기관이 기술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신속히 이전되는 구조적 선도도 시급하다.

셋째, 규제와 혁신의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활용과 실험을 과감히 허용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 지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오히려 한국 AI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넷째, 글로벌 협력 전략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미·중 양자 선택을 넘어서 유럽, 동남아, 중동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형 AI 기술을 현지 산업 수요와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미·중과 같은 초대형 AI 모델 경쟁을 그대로 주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신 '작지만 강한'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AI 전략,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시너지, 실무형 AI 인재 양성, 공공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이 그 핵심이다. 딥시크의 등장은 한국 AI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제 한국은 제3의 길로 '실용적 AI 강국'을 지향해야 하며, 그 전환을 실행에 옮길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